

민주당의 역사와 정치철학

이진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2023. 7.

민주당의 역사와 정치철학

이 진 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 |
|--------------------------------|----|
| 요약 | i |
| 1 민주당의 역사 | 1 |
| 2 민주당 강령의 역사 | 6 |
| 3 민주당의 정치철학 | 10 |
| 4 경제·사회정책의 변화 발전 | 14 |
| 5 통일·외교 정책의 변화 발전 | 19 |

요 약

○ 목적

- 민주당과 강령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창당선언문과 강령의 원문을 직접인용 정리, 민주당의 정치철학을 전 세계 중도진보정당의 주류 노선과 비교

○ 민주당의 역사

- 1955년 9월 18일 창당된 민주당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국민과 더불어 만들어온 장구하고 위대한 전통, 신익희의 ‘못살겠다 갈아보자’,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햇볕정책’,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인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 실현해온 대한민국의 역사
- 1955년 ‘민주당’, 1967년 ‘신민당’, 1985년 ‘신한민주당’,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3년 ‘열린우리당’, 2016년 ‘더불어민주당’으로 계속 진화해 온 영구(永久) 혁신의 역사

○ 민주당 강령의 역사

- 민주당은 국민정당을 대전제로 표방, 새천년민주당 이전까지 ‘민주화’ 대표, 이후 집권·수권정당으로서 ‘민주개혁’ 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능한 민생정당’ 자임

○ 민주당의 정치철학

- 민주당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역사적으로 구현해온 대한민국 정통정당
- 민주당의 정치철학은 전 세계 중도진보정당의 주류 노선. 미국 민주당의 ‘사회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독일의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 전 세계 수권정당의 ‘성찰 보수주의(philosophic conservatism)’를 융합한 ‘자유주의(liberalism)’

○ 경제·사회 정책의 변화 발전

- 민주당의 경제·사회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사회 규정 선도, ‘자유와 창의’와 ‘경제민주화’ 병행 기조

○ 통일·외교 정책의 변화 발전

- 민주당의 통일·외교 강령은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대북 햇볕정책 구현 및 진화

민주당의 역사와 정치철학

이진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1 민주당의 역사

○ 민주당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

- 대한민국의 역사는 냉소와 한을 넘어 열정과 흥으로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이룬 기적의 역사
 - 치욕적인 식민지에서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 온갖 고난을 기어이 이겨내고,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위대한 국민의 역사
 - ‘못 살겠다 갈아보자’에 응답한 산업화와 ‘독재타도, 민주쟁취’에 응답한 민주화 동시 실현
 -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화와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화 과업의 별도추진 동시실현 압축발전, 개발도상의 중진국 과제 완수
 - 민주당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정보화 추진과 한류를 비롯한 K-브랜드 확산, 4차 산업혁명 선도.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 식민지 없이 선진국으로 공인된 자수성가 대한민국
 - 촛불혁명은 1960년 4.19 혁명, 1987년 6월 항쟁에 버금가는 30년 주기의 시대교체 출발점.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미완의 과제를 실행해야 하는 역사적 의무
 - ‘이게 나라냐’에 대한 민주당의 응답은 ‘내 삶이 행복한 나라’. 민주당의 꿈, 행복국가는 온 국민의 꿈, 더불어 잘 사는 초일류 국가. ‘K-시대’ 실현
 - 이제 민주당은 ‘K-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정당, ‘K-정당’ 자임
 - ‘K-시대’는 진영의 한을 푸는 국내 중심 자체적 정쟁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높아진 자긍심에 기초, 온 국민의 흥을 북돋는 코리아 드림
 - ‘K-시대’는 추격하는 개발도상의 ‘중진국(developing nation)’과 추월한 이미 발전된 ‘선진국(developed nation)’을 넘어 글로벌 초격차와 모범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재설정하는 ‘선도국가(leading nation)’ 비전

- 민주당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국민과 더불어 만들어온 장구하고 위대한 전통
- 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 체화
- 민주당은 IMF 환란, 코로나 팬데믹의 대한민국 국난을 정보화 선도와 선진국 실현의 기회로 전환해온 유능한 정당
- 민주당의 역사는 신익희의 ‘못살겠다 갈아보자’,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햇볕 정책’,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인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 실현해온 대한민국의 역사
- 1955년 ‘민주당’, 1967년 ‘신민당’, 1985년 ‘신한민주당’,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3년 ‘열린우리당’, 2016년 ‘더불어민주당’으로 계속 진화해온 영구(永久) 혁신의 역사

① 민주당

- 1955년 9월 18일 창당된 신익희의 민주당은 임시정부의 항일독립정신을 계승, 이승만 독재에 맞서 반소(反蘇)용미(用美) 노선의 건국과 호국세력을 대통합한 대한민국 정통정당
- 신익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창설에 참여, 김구와 함께 일관된 임시정부 고수. 대한민국 임시헌장 기초위원이자 임정각료, 대한민국 초대, 2대 국회의장으로서 건국과 호국 세대 대표, 대한민국 건국자이며 의회민주주의자
- 민주당 창당세력은 해방공간에서 친소(親蘇)반미(反美) 노선의 항일 공산세력들과 대결하고 반소(反蘇)숭미(崇美) 성향의 친일 우익세력과 싸우면서 형성
- 신익희는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 6.25 전쟁과정에서 흩어진 ‘중간세력’을 다시 정비, 무소속의원들을 흡수하여 좌우의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당을 1955년 창당

○ ‘중간세력’ 결집

- ‘민주국민당’은 ‘민주독립당’을 비롯한 14개 중도정당(미군정의 분류에 의하면 중간우익 5, 중간 4, 중도좌익 5)과 기타 사회단체 등 여러 중간파세력들을 규합한 김규식 주도의 ‘민족자주연맹’(1947)의 잔류파, 신익희 주도의 ‘대한국민회’, 임정의 광복군총사령관 지청천 주도의 ‘대동청년단’ 등 중간세력을 결집하여 1949년 창당(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1997.)

- ‘못살겠다 갈아보자’
- 이승만 독재정권의 절대부패·절대무능으로 인한 절대빈곤을 타파하려는 시대적 요구 대변

- 사사오입 개헌이후 1956년 5.15 대선에서 신익희·장면 정부통령 출마. 한강백사장 연설 등 민주당 바람, 그러나 신익희 급서, 대규모 추모표, 장면 부통령 당선
-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 하야. 제2공화국 출범, 7.29 총선에서 민주당은 민의원 233석 중 175석 석권, 압승

② 1차 정비기

-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 정치활동 금지
- 민주당내 신파와 구파의 분열
 - 사실상 야당이 없는 상황에서 절대다수 여당, 민주당의 당내당 분열. 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의 구파와 장면 총리의 신파 갈등. 국정 혼란
 - 1963년 창당된 윤보선 등 구파의 민정당(民政黨)과 박순천 등 신파의 민주당으로 분열, 1965년 6월 민중당으로 통합
 - 한일협정 비준 반대 투쟁 방법으로 민중당 분당, 1966년 5월 강경파 윤보선 중심의 신한당 창당, 신파와 구파의 갈등 재연

③ 신민당

- 1967년 5.3 대선을 앞두고 1967년 2월 통합야당 신민당 출범, 윤보선 대선후보, 유진오 대표, 그러나 대선패배와 이어진 총선참패
- ‘40대 기수론’
 - 1969년 3선 개헌과 윤보선·유진오 정계은퇴 이후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 열망
 - 건국·호국 세대에서 민주화 세대로 세대교체. 김대중, 김영삼 전면 등장
 - 1971년 4.17 대선에서 김대중 돌풍, 직후 5.25 총선에서 득표율 44%, 여당과 불과 4%차 선전
 - 1972년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 총통제’. 민주주의 제도 말살
- 양김 주도 민주화 투쟁
 - 재야와 연합한 반체제 선명야당. 1975년 전당대회에서 김대중과 김영삼 연합, ‘민주회복, 야당성회복’을 기치로 내건 김영삼 대표 당선
 - 1979년 부마 민주항쟁과 10.26 사건, 박정희 독재 종말. 1980년 서울의 봄과 5.17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신군부 독재

④ 신한민주당

- 대통령 직선제
 - 재야로 내몰린 상황에서 지사적 정치인 DJ의 동교동계와 YS의 상도동계 연합,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와 1985년 1월 신한민주당(약칭 신민당) 창당, 2.12 총선 신당 돌풍

- 직선제 개헌을 통한 정권교체는 군정종식을 바라는 민심 대변. 1986년 직선제 개헌 1천만 서명운동 추진
- 직선제 개헌에 반하는 '이민우 구상' 돌발사태, 1987년 3월 직선제 쟁취 통일민주당 창당
- 4.13 호헌 조치에 대항, 민주당·재야 운동권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호헌철폐·민주쟁취 6월 민주항쟁 승리, 6.29 선언
- 김대중의 평화민주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분열. 1987년 12.16 대선패배와 1988년 4.26 총선 여소야대, 지역정당 체제 등장

⑤ 새정치국민회의

- 수권정당 뉴DJ플랜

- 1990년 1월 3당 야합 민주자유당, 호남배계 보수대연합 탄생. 1991년 4월 재야와의 통합야당인 신민주연합당(신민당) 출범
- 1991년 9월 신민당과 꼬마 민주당 통합, 민주당 재출범. 1992년 3.24 총선 선전. 그러나 12.18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 패배, 정계은퇴
- 민주당의 리더십 부재, 민자당의 분당, 1995년 6.27 지방선거 선전, 김대중 정계 복귀. 9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 새정치국민회의는 반독재를 넘어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실현 하려는 '새정치', 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항, '국민'을 전면에 내건 '본격적 수권정당'
- 연합과 수권의 정권교체 플랜, '뉴DJ 플랜', 지역등권, DJP연합과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경제대통령, 지식기반경제 DJ노믹스. 1997년 대선 승리.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⑥ 새천년민주당

- 국민통합 전국정당

- 제3의 길의 전 세계 중도진보 혁신 노선 선도,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으로 재창당
- 개혁적 보수 세력과 건전한 혁신 세력을 아우르는 중도개혁 전국정당, 개발도상의 중진국을 넘어 세계일류국가 지향,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비전 실행

⑦ 열린우리당

- '양김시대' 이후 새로운 정치

- 낡은 정치 청산, 새로운 정치 열망. 지연된 세대교체 실현
- 국민참여경선과 노사모를 통한 노무현 바람(노풍). 2002년 12.19 대선 승리

- 개혁적 국민통합 정당
 -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 창당.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는 시대를 종식시키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실현
 - 탈권위주의 정치문화. 책임총리제 및 당정 분리. 집단지도체제와 정당 민주화
 - '탄핵역풍'과 2004년 4.15 총선 과반승리. 그러나 당의장 수시 교체 등 정당 리더십 부재와 당정 관계의 혼선, 개혁 어젠다 설정에서 민심과 당심 불일치. 낮은 지지도의 지속과 선거 연전연패

⑧ 2차 정비기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
 - 2007년 12.19 대선 참패 및 이어진 2008년 4.9 총선 참패 등 연이은 선거참패
 - 2012년 4.11 총선에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첫 패배, 2012년 12.19 대선에서 야권단일화 일대일 구도에서 충격적 석패 등 연이은 선거패배
 - 일련의 혁신과 통합 과정.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속 재창당

⑨ 더불어민주당

- 촛불혁명
 -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리브랜딩
 - '이게 나라냐'는 촛불혁명의 외침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으로 응답
 - 한반도 전쟁위기와 코로나 국난 극복. 대한민국의 선진국 공인. 글로벌 선도 혁신적 포용국가 지향
 - 압도적 지지도에 근거, 2016년 4.13총선, 2017년 5.9대선, 2018년 6.13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화 이후 최초 전국선거 4연승
 - 그러나 국민 절대다수의 '촛불국민연합' 공고화 실패. 2022년 3.9 대선 석패, 이어진 6.1 지방선거 참패
 - 2022년 8.28 전대, 이재명 대표의 민생제일·국민우선 '이기는 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한 '내 삶이 행복한 나라' 지향

2 민주당 강령의 역사

○ 민주당의 강령

- 민주당 정체성
 - 민주당은 특정계급과 특정이념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을 대전제로 표방
 - 새천년민주당 이전까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민주화’를 대표했다면, 새천년민주당 부서는 집권·수권정당으로서 ‘민주개혁’ 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기에 ‘유능한 정당’ 자임
 - 1955년 민주당은 ‘민주세력’, 1967년 신민당은 ‘자유민주세력의 총결집체’, 1985년 신한민주당은 ‘전통적인 자생적 민주정당’,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는 ‘정통 민족·민주세력’의 ‘중도적 국민정당’, 2000년 새천년민주당은 ‘민주주의 정통세력의 개혁적 국민정당’, 2003년 열린우리당은 ‘정통 민주개혁세력’,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유능한 민생정당’ 자임

① 민주당

- 1955년 민주당 창당선언문에서 ‘국리민복 보장’, ‘민주세력의 집결 강화’, ‘어떠한 형태의 독재도 배격’, ‘생산의 증강’과 ‘분배의 공정’, ‘자유와 민주의 통일’ 명시. 이후 민주당의 향도 역할
 - “민주정치의 요체는 ... 국리민복을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정권의 원활한 이동으로서 정치의 광정(匡正)과 청신을 기함”
 - “민주세력의 집결 강화만이 국정쇄신의 방도임을 확신”하고 “공산독재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독재도 배격”
 - “자유경쟁 원칙에 의한 생산의 증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 특히 농민 대중과 근로층의 복리의 증강에 대한 강력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분배의 공정을 기하는 조치를 강구”
 - “민주우방과 제휴하되 ‘자유와 민주의 통일만이’ 국제정의에 합치”

② 신민당

- 신민당은 창당선언문에서 ‘자유민주세력의 총집결체’, ‘모든 재야 민주세력이 총집결한 범국민적 정당’, ‘정권교체를 이룩하여야할 수임정당’, ‘전진 정당’, ‘정책 정당’ 자임
 - “신민당은 이 나라 자유민주세력의 총집결체다. 참된 민주신념과 민족정기에 서린 구국이념을 바탕으로 반일·반공·반독재 투쟁의 피어린 전통을 자랑하는 민중·신한 양당의 합당을 핵심으로 하고 모든 재야 민주세력이 총집결한 범국민적 정당”

- “신민당은 바로 온 국민의 희망이요 의욕이요 염원을 상징하는 국민의 정당이다. ... 신민당은 이 나라의 반민주적인 군정 횡포를 종식시키고 무자비한 수탈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할 자위(自衛)정당”
- “모든 군정의 때를 벗고 자애와 성실과 정직이 통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로 반정하는 정권 교체를 이룩하여야할 수입정당.”
- “신민당은 이 나라를 국제적 경제침략에서 보호하고 자유민주 기본체제에서 전진적 자세로 발전 보완하며 뒤떨어진 경제적 후진성을 시급히 만회하고 민족자립 경제를 목표 하는 전진정당”
- “신민당은 과거의 수구적 인습과 무원칙한 파쟁을 지양하고 건설적이며 합리적 대안과 창의에 찬 청사진을 갖고 생산과 분배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정책 정당”

③ 신한민주당

- 신한민주당은 당의 성격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에 공헌하는 건전하고 전통적인 자생적 민주정당”임을 선언
- “현 군부정권의 폭력정치에 의하여 가사(假死)상태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 “언론, 집회, 결사, 선거 등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여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 “자유경제체제를 확립, 발전시키고, 현 경제체제가 농어민·노동자·중소기업 등 저소득층의 희생위에 소수의 기업들만이 안주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부익부빈익빈의 경제현실을 개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 “제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오늘의 부정과 부패, 불신, 빈곤, 공포와 좌절감에 빠진 절박한 현실을 타파하여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윤리·도덕관념과 애국·애족심을 함양하여 서로가 신뢰하고 행복을 향유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 “자주, 자력에 의한 국방을 추구하며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통일의 역량을 배양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토통일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우방제국(諸國)과 유대를 공고히 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사회에 공헌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④ 새정치국민회의

- 새정치국민회의는 강령 전문에서 “조국광복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민주화와 통일 운동을 선도해온 이 나라의 정통 민족·민주세력이 모인 정당” 자임
- 또한 “우리 당은 21세기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위해서 참여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중도적 국민정당” 자임

- “넓은 정치를 버리고 새정치를 추구”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정치는 참여의 정치, 통일 주도의 정치, 21세기의 격변에 대비한 정치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새정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안정속에 개혁을 실현”할 것을 천명
-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전면화하고 “중산층에게 안정을, 서민에게 희망을, 여성에게 기회를, 젊은이에게 꿈을 주는 정치를 실현할 것”을 천명

⑤ 새천년민주당

- 새천년민주당은 강령 전문에서 ‘민주주의의 정통세력’의 ‘개혁적 국민정당’,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추진주체’ 자임
- 민주주의·시장경제·생산적 복지의 3대 이념과 인권민주국가의 실현, 전면적 개혁의 완성과 지식정보화 촉진, 생산적 복지의 정착, 국민 대화합 실현, 남북 화해협력과 민족 상생 구현의 5대 목표에 찬동하는 국민적 개혁세력의 집결체
- 이념대립을 극복한 ‘중도개혁주의’, 지역분열을 넘어서는 ‘국민통합주의’, 독선적 민족주의를 넘어 인류의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주의’, 분단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일민족주의’, 세대간 조화와 균형에 바탕을 둔 ‘노장청통합 사회’, 대화와 타협의 ‘화합정치’ 지향

⑥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은 창당선언문에서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 산업화시대를 이끌어온 양심적 주역, 새로운 시대정신과 전문능력을 갖춘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
- 기본정책에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해 “중도·건전 보수·합리적 개혁세력을 포괄 하여 국민 다수를 대표하는 정치를 구현한다.”고 천명
- 강령 전문에서 “정통 민주개혁세력” 자임,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의 실현,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의 구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의 건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
- “국민과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진정한 ‘열린 정치’의 길”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우리’가 되는 참된 정치공동체를 지향”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안정과 발전, 번영의 21세기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전쟁과 빈곤이 없이 평화로운 세상, 사랑과 화해가 가득한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

⑦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개정된 강령 전문에서 “유능한 민생정당” 자임,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를 핵심가치로 삼아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을 천명
- “특권과 차별,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
-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감염병,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
-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 사회를 실현”
- “혁신과 성장을 통해 국민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하는 나라를 지향”
-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

3 민주당의 정치철학

○ 자유주의 정치철학

-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구현한 대한민국 정통정당
- 민주당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역사적으로 구현해온 대한민국 정통정당
- 민주당의 정치철학은 전 세계 중도진보정당의 주류 노선
- 미국 민주당의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독일의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 전 세계 수권정당의 ‘성찰보수주의(philosophic conservatism)’를 융합한 ‘자유주의(liberalism)’
- 사회·정치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독재도 배격하고, 경제적으로는 공정경쟁의 시장 질서를 중시하고, 태도에서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융합한 ‘중용’ 정신
- 파시즘과 공산주의 등, 좌우의 독재와 투쟁했던 미국 민주당의 자유주의, 탈냉전 시기 ‘제3의 길’을 선도했던 미국 민주당의 중도진보 노선과 유사
- 민주당은 뉴DJ이후 미국 민주당과 유럽 시민당의 현대화 선취
- 탈냉전 이후 미국 신민주당의 제3의 길 벤치마킹.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제3의 길’, 독일 시민당 슈뢰더(Gerhard Schröder)의 ‘신중도(Neue Mitte)’ 등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자유주의화

○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 : 유럽의 제3의 길-신중도(1998.6.)

-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오류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변화된 현실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제시
- “과거에 사회정의의 축진은 때때로 균등한 소득과 혼동되었다. 그 결과, 보상과 책임의 중요성이 경시되었고 사회민주주의가 창의성, 다양성, 수월성을 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과 평준화와 연계되었다.”
- “사회정의를 달성하는 수단은 그것의 목적 또는 경쟁력, 고용, 생활수준에 대한 세금의 영향과 무관하게 계속 높아지는 공적 지출과 동일시되었다. 좋은 공공서비스는 사회민주주의자의 결정적 관심이지만 사회적 양심은 공공지출의 수준으로 측정될 수 없다. 사회는 이 지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돕게 할 수 있는가에 의해 진정으로 평가된다.”
- “국가가 해로운 시장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은 너무나 자주 정부의 범위와 관료제의 과도한 확장을 가져왔다. 개인과 집단의 균형은 왜곡되었다. 개인의 성취와 성공, 기업가정신,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정신과 같은 시민의 중요한 가치는 너무나 자주 보편적 사회보호에 종속되었다.”

- “상당기간 동안 권리는 책임 위에 있었다. 그러나 가족, 이웃,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국가로 이전될 수 없다. 상호의무의 개념이 망각된다면 공동체정신이 쇠퇴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이 결여되고 범죄와 파괴가 상승하고 법체계가 대처할 수 없다.”
- “성장과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를 조절하는 일국정부의 능력은 과장되었다. 부의 창출을 위한 개인과 기업의 기획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었다. 시장의 약점은 과장되었고 그 장점은 과소평가되었다.”

○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파리선언’(1999.11.)

- 기업가정신을 연대의 새로운 차원, 사회주의정신으로 선언하는 사회민주주의자의 획기적 이념전환
- “우리는 성과의 재분배, 개인 창의성의 고무, 위험을 감당할 의지를 제안한다. 이것이 부의 창출과 타자를 위한 기회라는 사회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문화적 문제에서 기업가정신(spirit of enterprise)을 장려하는 것은 개인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보상하는 새로운 문화를 발생시킴으로써 교육과 직업훈련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연대의 새로운 차원이다. 이러한 협력적 의미에서 기업가정신의 재분배는 사회를 부정하는 금전적 개인주의(mercenary individualism)에 정반대되는 연대의 표현이다.”

① 사회자유주의

- 사회·정치적으로 민주당은 소극적 자유를 넘어 적극적 자유의 실현을 목표로 국가의 촉진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자유주의 경향
- 사회자유주의는 미국 민주당의 ‘자유주의’에서 현실화, 시대적 과제에 도전하면서 진화하는 중도진보 전통
- 경제위기 극복 국가개입과 파시즘과의 전쟁을 선도했던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의 ‘뉴딜’
- 국민의 개척자 정신과 국가의 전략과제 도전을 강조했던 케네디(John F. Kennedy)의 ‘뉴 프론티어’
- 시장만능의 신우파와 정부만능의 구좌파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려는 클린턴(Bill Clinton)의 ‘제3의 길’
- 2개의 국민으로 분열된 미국을 통합,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실현, 중산층을 복원하려는 오바마(Barack Obama)의 ‘담대한 희망’

○ 미국 민주당 헌장 전문(CHART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THE UNITED STATES, PREAMBLE)

-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추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틀 안에서 개인의 자유(individual freedom)이다. 모든 시민의 의미있는 참여의

를 안에서 정치적 자유이다. 미국 헌법을 준수하면서 당은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노력하고 자유인의 사회(a society of free people)에 맞는 방식으로 공무를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

○ 자유주의

- “우리의 반대자가 우리를 ‘자유주의자(Liberal)’로 지칭할 때, 자유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들이 그렇게 믿기를 원하듯이, 자유주의자가 외교정책에서 유약하고, 지방정부에 반대하고, 납세자의 돈에 무관심한 자를 의미한다면 민주당과 민주당원의 실적은 우리가 이런 의미의 자유주의자가 아니란 것을 증명한다.”
- “뒤가 아니라 앞을 보고, 경직된 반응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국민의 복지, 즉 건강, 주택, 학교, 일자리, 시민의 권리, 시민의 자유에 신경 쓰고, 외교정책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교착과 의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자유주의자라면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자유주의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존 F. 케네디, Eric Alterman, “Why We’re Liberals: A Political Handbook for Post-Bush America” 2008, p.32)

② 질서자유주의

- 경제적으로 민주당은 국가가 질서정책으로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시장을 만드는’(making of market) 이념, 즉 질서자유주의 경향
- 질서자유주의의 근본확신은 독과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독점에 대한 규제와 감독, 공급자의 수적 확대와 최적 분산, 안정과 균형 유지 등 국가의 ‘질서정책’을 투입한다면 시장을 효율과 창의의 경쟁체제로 재건할 수 있다는 것임
- 궁극목표는 ‘울창한 수풀 같은’ 중소기업군의 활동기반과 ‘하늘을 찌르는 거목 같은’ 대기업의 기동공간이 동시에 보장되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제
- 독일 기본법의 경제조항은 ‘모두를 위한 복지’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치 아래 독일 중도보수당 기민당(CDU)내의 자유주의 정파를 대변하여 전후 독일경제를 재건한 초대 경제장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의 질서자유주의 시장이념 반영
- 시장질서를 안팎에서 위협하는 내부의 독과점과 외부의 제약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자유방임주의로는 시장질서를 지킬 수 없음. 이 때문에 에르하르트는 자유방임주의의 시대착오성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출발. 동시에 독과점 추세를 ‘법칙’으로 보고 ‘시장의 종말’과 등치시키는 좌익 비판주의와도 투쟁
- 독일 사회민주당 또한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Godesberger Programm)에서 사상의 자유 정당 선언, 질서자유주의 정신에 입각, 경쟁과 자유시장을 진보의 수단으로 찬양

○ 독일 사민당 고데스베르크 강령(1959)

- 고데스베르크 강령의 수정주의적 특징은 첫째, 자유주의 적극 수용
 - “사회민주당은 사상의 자유 정당이다. 사회민주당은 상이한 신념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 둘째, 자유의 개념을 경제로 확장하여 국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맑스주의 이데올로기 폐기
 - “경제의 전체주의적 통제는 자유를 파괴한다. 그러므로 사회민주당은 자유경쟁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곳에서 자유시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시장이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지배된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 경제영역에서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 셋째,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국민정당(Volkspartei) 공식화
 - “사회민주당은 노동계급의 정당에서 국민의 정당이 되었다.”

- 대한민국 헌법은 독일 기본법과 유사. 질서자유주의 정신을 수용한 우리 헌법은 119조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천명
 - 이어서 2항은 이 시장경제를 ‘만들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

③ 성찰보수주의

- 태도 측면에서 민주당은 정치·경제·사회의 다원성,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인정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보편가치를 존중하는 현명한 ‘성찰보수주의’ 경향
 - 다원성, 균형, 보편가치를 존중하는 성찰보수주의는 시민단체의 항의를 넘어 전 세계 자연스러운 집권당의 준비된 수권능력으로 구현
 - 수단을 목적화하여 목표와 수단을 전도하는 교조가 아니라 보편적 목표를 ‘보수’하면서 구체적 수단을 ‘성찰’하는 태도
 - 좌우의 보수주의의 이념적 획일주의를 배격하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성찰하는 실력·실용·실적 중시 태도, 시대에 맞춰 수단을 혁신하는 ‘영구 수정주의(permanent revisionism)’
 - 백만분의 일의 위험까지 성찰, 존망의 위기에 대비하는 안보의 기본은 보수, 국가안보를 넘어 인간안보 병행, 전측면적 안전보장을 지향하는 포괄안보 실현에서 성찰적 보수는 진보
 - 국민의 공감대를 받드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인류의 보편가치를 실천하는 세계주의와 함께 끊을 수 없는 한민족의 동포애, 통일민족주의 병행
-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보편가치를 ‘보수’하고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수단을 ‘성찰’,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강령의 정신

4 경제·사회정책의 변화 발전

○ 경제·사회 강령

- 민주당의 경제·사회 강령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사회 규정을 선도
- '자유와 창의'와 '경제민주화'의 병행 기조는 민주당의 일관된 경제사회 강령

○ 대한민국 경제원칙

-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1955년 민주당은 '생산증강'과 '공정분배' 병행
- 신민당은 '계획과 자유', '공익과 사익'의 '혼합경제체제'. '빈민계층 구출'과 '중산층 육성'을 과제로 제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맹아
- 신한민주당은 '창의와 자유의 자유경제체제'와 '안정과 성장' 명시, 현행 헌법의 경제·사회 규정 토대 제시. '복지사회'와 '첨단산업시대' 명시
- 새정치국민회의는 경제에서 '개방시대의 균형경제', 사회에서 '안정과 꿈과 희망의 건강 사회' 제시. '개방'과 '중산층'의 '안정', '희망', '기회' 강조
- 새천년민주당은 '지식기반경제' 구축으로 '세계일류경제' 건설 목표 제시로 선진국 실현 명시. '서민의 중산층화'로 '중산층 중심의 나라' 제시
- 열린우리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 할 맛 나는 세상' 건설 목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과 함께 '지식문화강국' 건설 제시
-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패러다임 대전환 선도'로 '포용경제', '혁신성장'과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의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제시

① 민주당

- 1955년 민주당의 경제·사회관련 정강과 기본정책은 이후 민주당의 경제·사회 강령에 계속 구현된 대담하고 진취적인 노선
- "자유경제 원칙하에 생산을 증강하고 사회주의('사회복지주의'의 1950년대 용어)에 입각하여 공정한 분배로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며, 특히 농민·근로자 기타

근로대중의 복지향상을 기한다.”

- “자유경제의 원칙하에 생산을 증강하고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공정한 분배”를 기한다는 과감한 주장은 기업가 위주 ‘자본주의’와 노동자 위주 ‘사회주의’의 대립 속에서 국민적 중도노선 추구, 대한민국 헌법 정신 구현
-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되 분배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혼합,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복지지향의 혼합경제’ 추구
- 기본정책에서 시대를 앞질러 “국민기본생활 보장”, “중소상공업의 적극적 보호육성”,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의료의 기회균등” 등 선진적 정책방향 명시

② 신민당

- 신민당의 경제강령은 1955년 민주당의 강령을 이어받아 “계획과 자유,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혼합경제체제의 확립을 기한다.”고 천명
- 기본정책에서 “먼저 관기(官紀)를 광정(匡正)하고 계획과 자유,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모든 기업에다 새로운 자극을 주고 파탄에 직면한 농촌경제를 소생시키고 빈민계층을 구출하고 중산층을 육성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경제·사회정책 목표 제시
- “자유방임적 자유경제는 물론 독재적인 계획경제도 이를 배격하고 원칙적으로 자유경제를, 필요한 한계 내에서 계획경제를 혼합하여 생산성의 증진과 완전고용을 성취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 “중소기업은 건전한 경제의 토대이다. 현대의 경제를 좌우하는 지도적 부문은 대기업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대기업의 독점화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진정한 자유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병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중소기업을 계열화로 육성·강화하여야 한다.”
- “사회정책은 개인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발전하고 자기 책임 하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과 사회에 곤고(困苦)를 가져오는 사회상태는 경제건설이라는 미명 하에 불가피·불가변의 것이라고 체관(諦觀)되어서는 안 되며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 “원시적인 생명유지조차 어려운 서민대중에게 의식주의 최저한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식주 및 노동의 긴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과감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③ 신한민주당

- 신한민주당은 신민당의 경제·사회강령을 이어받아 강령에서 “창의와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경제체제의 원칙아래 합리적인 경제계획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여 국력

- 을 신장하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복지사회를 이룩한다.”고 천명
- 정강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배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사회를 이룩한다.”고 명시
 - 기본정책에서 “자유경제체제의 발전과 확립”, “복지사회의 건설”을 명시
 - “중산계층의 벽을 두터히 하여,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게하여, 빈부의 격차를 해소한다.”
 - “오늘날 국제질서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배격되고 있고, 21세기에는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좁혀 형성될 것이므로 경제구조를 혼합경제의 형태로 한다.”
 - “중소기업을 적극지원 육성하고, 외자의 원활한 조달을 피하고 절정에 달한 외채의 절감을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정책을 축소한다.”
 - “첨단산업시대인 2천년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전자, 유전공학, 반도체 산업 등에 투자를 증가하고 이에 수반되는 우수 두뇌 개발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기술의 축적을 기하며 나아가서 외자가득율을 높게한다.”
 - “수출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수출질서의 확립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경제외교를 강화하여 보호무역의 장벽을 철폐하며, 내수산업 규모의 적정선 유지와 상품의 품질 향상을 기하며, 이념을 초월하여 수출입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의 경제 교역을 도모한다.”
 - “국민 각자가 경제적인 안정을 향유하고 민주적,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받는 복지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윤리·도덕관념과 애국·애족심의 함양을 기한다.”
 -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 복지기금제도의 확충, 제(諸)보험제도의 확대, 고용의 확대, 실업의 해소, 공해문제와 주택문제의 해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최저임금제도를 확립하며 청소년 및 노약자의 보호·육성 등의 정책을 입안 시행한다.”

④ 새정치국민회의

- 새정치국민회의는 경제 강령에서 “개방시대의 균형경제”를 목표로 제시
 -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적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규제를 완화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 “우리는 WTO체제의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평적 협력체제를 실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 “세계경제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한다. 즉,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각 산업별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한다.”
- 사회 강령에서 “안정과 꿈과 희망의 건강사회”를 목표로 제시

- “우리는 중산층에게 안정을, 서민에게 희망을, 여성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주는 신명나는 사회를 실현한다.”
- “우리는 생존권과 안정이 보장된 쾌적한 삶, 인간적인 삶,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를 추구한다. 따라서 복지를 사회적 통합력을 유지시켜주는 생산적 복지로, 환경에 대한 투자를 예방적 차원의 선행투자, 문화를 소비가 아닌 창조로 발전시킨다.”
- “우리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든다. 우리는 학력이나 출신지역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장애인도 정상인과 똑같이 대우받는 사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활동하는 사회를 만든다.”

⑤ 새천년민주당

- 새천년민주당은 강령에서 “시장경제의 확립과 지식기반경제의 건설”을 경제 목표로 제시
 - “시장경제는 우리 경제의 기본틀이다. 우리 당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수호한다. 벤처·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창업을 촉진하여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군과 초일류 대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경제 체제를 이룩하도록 한다. 우리 당은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여 세계일류경제를 건설한다.”
 - 경제 기본정책에서 “시장경제 확립과 지식기반경제 건설로 세계 일류 경제 실현”을 목표로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 “기업·금융·공공부문·노사관계 등 4대 개혁의 완성” 등을 제시
- 강령에서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국민건강의 보장”을 복지 목표로 제시
 - “우리 당은 중산층을 튼튼히 하고 서민의 중산층화를 적극 추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중산층 중심의 나라를 건설한다. 우리 당은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중산층과 일반 서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인간개발과 사회투자를 강화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를 강화한다. 나아가 우리 당은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완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 복지 기본정책에서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기초생활의 보장”을 목표로 “전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초생활 완전보장”,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완전고용 조기달성”, “사회보험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을 제시

⑥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은 경제 강령에서 “잘사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 할 맛 나는 세상”을 천명

-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시장경제질서를 형성”
- “IT,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물류와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복합체인 동북아경제중심을 건설하는 동시에, 지방을 혁신하여 발전의 주체로 세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한다.”
- 경제 기본정책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목표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등을, “경제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확충”을 목표로 “동북아 경제중심의 건설”, “국내외 투자 활성화로 일류 실물 경제로의 도약” 등을 제시
- 복지 강령에서 “따뜻한 나라”를 목표로 제시
 - “저소득층에 대한 완전한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의 내실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공정한 대우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절대빈곤의 위험 없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보장하고, 우리 민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며, 창조적 문화역량의 강화를 통해 문화적 가치가 사회전반에 살아 숨쉬는 지식문화강국을 건설한다.”
 - 복지 기본정책에서 “참여복지의 실현으로 따뜻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참여 복지 실현”, “탈빈곤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의 건설”을 목표로 “분권·자율·참여의 교육혁신”, “문화강국의 기틀 마련과 문화산업 육성” 등을 제시

⑦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강령에서 “글로벌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을 목표로 “포용경제 기반 구축”, “혁신 성장 강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제시
- 일자리·노동 강령에서 “노동존중사회”를 목표로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등을 제시
- 복지 강령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체제”를 목표로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사회안전망과 중앙·지방 간 균형복지”, “건강권 보장과 국가보건의료체제 확립” 등을 제시

○ 통일·외교 강령

- 민주당의 통일·외교 강령은 우리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룩하려는 대북 햇볕정책 구현 및 진화
 -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화해협력 추진'의 햇볕정책 3대 원칙 실현 과정
 - 1955년 민주당은 멸공·북진통일론이 연호되었던 6.25 전쟁 직후의 엄혹한 상황에서 대담하게 '자유와 민주의 통일' 선도
 - 신민당은 이를 이어받아 '자유우방과의 유대 강화'와 '자유 민주 원칙에 의한 국토통일' 천명하면서 평화통일 강조
 - 신한민주당은 '국방·안보 태세의 강화'와 '평화민주 통일' 병행, '세계평화와 인류사회 공헌'과 '경제외교' 강조
 - 새정치국민회의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통합'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명시, '외교강국·강병안보를 통한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한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구심적 역할' 강조
 - 새천년민주당은 '남북화해협력의 발전'과 '평화 공존통일의 기반 확립'과 함께 '보편적 세계주의'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심적 역할 수행' 강조
 - 열린우리당은 '한반도 평화'와 함께 '남북 공동번영' 명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주도' 강조
 -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명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및 공공외교 추진' 표명

① 민주당

- 1955년 민주당은 정강에서 "국력의 신장과 민주우방과의 제휴로써 국토통일과 국제정치의 확립을 기한다."고 천명하고 "자유와 민주의 통일" 정책 제시
 - "자유와 민주의 통일" 정책은 당시 상황에서 당연시되었던 급진적 무력통일('북진통일'이나 침략적 '무력적화')과 분단고착화 사이의 중도를 걷는 통일노선
 - "자유와 민주의 통일"은 남북교류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이루려는 정책기조

② 신민당

- 신민당은 민주당의 강령을 계승, 정강에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유 민주

원칙에 의한 국토통일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표명

- 통일·외교 기본정책에서 “소박한 통일론을 조심성있게 배격하면서 민족주체성에 입각하여 평화와 자유 안에서의 통일 실현” 제시
 - “대한민국은 남북한의 모든 한국민을 대표하여 행동한다. 핵심적인 의무는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여 모든 국민에게 자유로운 공동의 고향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
 - “공산주의정책이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적인 자유통일을 방해하여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동서 양진영의 격심한 대립 속에서 한국의 자유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굳은 단결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우호관계는 우리 당 외교정책의 초석이다. 우리들은 국가적 이익의 확보와 민족적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모든 노력과 주장이 거시적으로 볼 때, 결코 미국의 이익과 안전에 위배되지 아니함을 확신한다.”

③ 신한민주당

- 신한민주당은 당의 성격에서 ‘평화민주 통일정당’과 ‘세계평화와 인류사회 공헌정당’ 자임
 - “자주, 자력에 의한 국방을 추구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통일의 역량을 배양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토통일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우방제국(諸國)과 유대를 공고히 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사회에 공헌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 통일 기본정책에서 “국토통일의 완성”을 목표로 제시
 - “민족주체정신에 입각하여 민주방식에 의한 국토통일을 완성한다. 국방·안보력의 강화, 민주정치의 발전, 효율적인 경제 건설과 복지사회를 이룩하여, 자주, 민족적 국토통일을 위한 태세를 확립한다.”
 -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여 상호방문, 서신·연락, 경제·문화·체육 등의 교류를 촉진하고, 온 국민의 여망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한다.”
- 외교 기본정책에서 “국방·안보 태세의 강화”와 “자주 외교의 강화”를 목표로 제시
 - “안보와 국토 방위력의 강화 및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군을 정치적으로 엄정중립 시키며, 군기의 숙정(肅正), 통수력의 확립, 방위산업의 육성과 군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대공(對共)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호혜 평등과 자주권을 외교의 기본방침으로 한다.”
 - “격렬한 국제경제경쟁에 대처하여 강력한 경제외교를 전개하여 수출산업의 신장을 기한다.”

④ 새정치국민회의

- 새정치국민회의는 통일 강령에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통합”을 목표로 제시
 - “한반도의 당면한 목표는 평화와 안정이며 남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교류하여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민족통합을 이룩해 나간다.”
 - “우리는 분단의 고통과 비용을 절감하고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기약하기 위해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하에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3대 강령으로 삼아 제1단계 남북연합, 제2단계 남북연방, 제3단계 완전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이룩해 나간다.”
- 외교안보 강령에서 “외교강국·강병안보를 통한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
 - “대륙과 해양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능력에 따라서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주도하고 세계대국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적응을 넘어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하고 형성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미·중·일·러의 4대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를 중심한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한다. 전통적 한·미 안보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한다.”
 -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며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방력은 절대 필요하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⑤ 새천년민주당

- 새천년민주당은 통일 강령에서 “남북화해협력의 발전과 평화공존통일의 기반 확립”을 제시
 - “우리 당은 통일민족주의와 민족평화주의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남북이 서로 평화 공존하면서 제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냉전구도들 해체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립한다.”
 - 통일 기본정책에서 “남북화해협력의 발전과 평화공존통일의 기반 확립”을 목표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의 평화통일 추진”, “남북당사자원칙과 국제사회협력을 통한 평화정착”, “상호 이익이 되는 민족경제의 부흥 도모” 등을 제시
- 외교 강령에서 “보편적 세계주의의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제시
 - “21세기는 배타적·독선적 민족주의의 낡은 틀을 버리고 인류의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주의 시대이다. ... 우리 당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위치와 남북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 외교 기본정책에서 “보편적 세계주의의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창조적 외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국제협력 강화”, “세계 일류경제를 지향하는 경제외교” 등을 제시

⑥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 강령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제시
 - “우리는 남북한 실질협력의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주적 방위역량의 확보와 적극적인 다자 외교 및 경제·통상외교를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시키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 통일 기본정책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과 남북 공동번영의 추구”를 목표로,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 “남북교류협력의 심화·발전”,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등을 제시
 - 안보 기본정책에서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 구축과 지역안보협력 주도”를 목표로, “한국적 여건에 맞는 자주적 방위 역량 기반 구축”, “미래 지향적 한·미 동맹관계 확립으로 지역 안보협력 주도” 등을 제시
 - 외교 기본정책에서 “국가위상제고와 경제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을 기조로, “다자 외교 적극 참여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능동적 경제·통상외교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주도” 등을 제시

⑦ 더불어민주당

- 통일 강령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통일기반 조성”,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경제 실현”,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제시
 -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및 9월 평화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공감대에 기초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
- 외교·안보 강령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및 공공외교 추진”,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요 국가·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추진”,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 안보 외교 구현”, “재외국민 안전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목표로 제시
 -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방위역량 강화와 혁신적 병영환경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 “군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민주당의 역사와 정치철학